

금융위, 전북서 첫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복지지원·보험지원 협약 맺어… 금융 취약계층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 ‘기대’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윈윈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 3년간 20억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유치,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 진출,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산업 성장 기반 구축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수립·제출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형 지원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 전북형 포용금융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금융복지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18개 사업 2,161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1조5,87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과 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들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북도, 무형유산 보유자 간담회 개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30여명 참여… 전승 활성화 정책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1일 도청 도지사 회의실에서 국가 및 도 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 대표 30여 명을 초청해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 회장 10명, 전북무형유산연합회를 포함한 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 대표 20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

해, 전수시설 개선, 전승 환경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도는 내년부터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전북 무형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유자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무형유산을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이자 관광·교육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브라질 수도서 ‘공공외교 한마당’ 성황

세종학당·IESB대학서… 판소리·비빔밥·서예 등 전북 문화 체험 브라질 K-Festival 특별참여… 500인 비빔밥 퍼포먼스 등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공공외교 한마당’을 열고 전북의 문화와 매력을 알렸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주브라질한국대사관과 협업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판소리·풍물놀이·비빔밥·한복 등 전북의 전통문화를 현지 시민과 공유하며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첫 일정은 브라질리아 연방대학 내 세종학당에서 열렸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과 한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풍물놀이, 판소리, 서예 시연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서예를 써보고 판소리를 배우는 체험 시간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8일에는 현지 명문 조리학교인 IESB 대학에서 ‘원데이 비빔밥 아트 클래스’가 열렸다. 학생과 교수진은 직접 비빔밥을 만들며 화합과 어울림의 정신을 체험했고, “음식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하나 되는 경험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9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리아 시내 파르케 다 시다지(Parque da Cidade)에서 열린 K-Festival이었다. 전북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대금,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전통공예와 한복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특히 30일에는 500명이 함께 만드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지 언론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앞서 열린 비빔밥 클래스 참가 학생들도 참여해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안 2133억원 편성

작년 대비 73.9% 증가… RE100 산단 조성·SOC 조기 완성에 집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907억원) 증가한 2,133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일 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 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해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2·3권역 개발의 마중물이 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030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총본한 공사비를 편성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의 마지막 축인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은 조기 착공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편성한 새만금 지역 전체 예산안은 1조649억원으로 지난해(7,963억원)보다 2,686억원, 33.7%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을 비롯한 새만금 사업지역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개발 사업이 본격화에 몰아붙였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도약시키고 국민들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RE100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상공에너지 매각,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 성과” | 조국혁신당 도당·익산지역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익산시지역위원회는 한국중부발전의 (썬) 상공에너지 자본 매각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핵심 요구가 공식 회신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상공에너지 노동조합과 조국혁신당은 할값·특혜 매각 논란에 맞서 매각 전면 중단을 요구했으나, 중부발전이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노조와 조국혁신당은 고용 보장과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매각 조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공식 회신에서 중부발전은 △ 고용 승계: 매수인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승계하고 5년간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 △ SRF(고형연료) 사용 금지: SRF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 △ 공공성 확보: 중부발전이 상공에너지 지분 약 24%를 유지하며 경영 정상화까지 참여 계획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택 상공에너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 공공 에너지 자원이 사모펀

드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고용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명문화된 것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매각 이후 상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철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매각 중단을 요구했으나, 불가피하다면 노조와 합의된 조건 아래 고용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번 요구가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양진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현안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노동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향후에도 에너지 가격, 고용 안정, 경영 투명성 등 주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상공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산으로 가는 관광개발로 전주가 위험해져” | 혁신당 도당·경제성 등 한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일 논평을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중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산으로 가는 관광개발로 전주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시장이 오히려 그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시민이 금급한

것은 사업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기준치 1.0을 간신히 넘겼으며, 전국 케이블카 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케이블카 노선이 통과하는 기린봉과 동고사, 견원왕궁터 일대는 전주의 역사와 경관이 응축된 공간으로, 송전지주와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식의 개발은 도시의 얼굴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쳤고, 밀어붙이기식 시정은 케이블카 사업뿐 아니라 전주천 버드나무 제거,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 시장의 행정이 시민과 괴리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손준석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손창=이양원 기자